지역간 공생발전의 길

-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

2012. 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목 차

Ⅰ 지역발전정책의 발자취

Ⅱ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Ⅲ 2012년, 발로 뛰는 지역발전위원회

Ⅰ 지역발전정책의 발자취

개발년대('60~'80년대): 산업화, 도시화

- 지방에 산업단지, 도로 · 항만 등 SOC 건설

국가발전정책 ➡ 지역발전정책

세계화시대('90년대~)

- IT,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

참여정부 : 균형발전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 세종시, 혁신도시(10개) 건설

각종 국책사업의 입지공모제도 시행

- 태권도공원('04),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07), 로봇랜드('07)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자체간 경쟁 심화 → 갈등 유발

프랑스 : 지역정책의 대전환

- '60년대 이후 수도권(파리)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및 파리경쟁력 동시 저하

- 2000년대 : 분권정책, 광역권정책으로 대전환
  - 헌법 개정('03년) :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는 문구 추가(헌법 제1조)
  - 22개 광역경제권 → 6개 광역경제권으로 권역규모 확대

'그랑 파리(Grand Paris)' 정책 추진
→ 파리권 경쟁력 제고 도모

Ⅱ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5+2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 권역내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하나의 편대 형성
-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살아보자"

→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간 협력 기반 마련**

원칙에 입각한 국책사업 입지 결정

- LH공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진정 국면**

서울경제

합리적으로 결정된 '과학벨트' 입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점지구로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신동과 문곡지구가 선정되고 기능지구는 청원·천안·연기 등이 지정됐다. 그리고 일부 연구단의 경주·대구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각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온 과학벨트 입지가 최종 확정되자 탈락지역의 반발 등 개별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LH 본사이전에 이어 과학벨트 입지가 갈등 면서 지역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벨트는 당초 세종시를 중심으로 계획됐으나 국회에서 세종시 수

아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주환경. 국내외 집근 용이성, 연구와 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등이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이 가장 적합하지만 지역 균형발 전이라는 정치논리에 탈락이 정해 대상에서 제외됐 기 때문에 대전이 선정된 것은 차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평가점수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전은 이미 상당한 연구기반을 구축한 대덕연구단지가 자리잡 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가지 짚 이러면 대덕지구에 집중되지 않고 일부 연구기능이 분산됐다는 점이다. 최종 입지선정에 앞서 나온 대 전-대구-경주를 잇는 '삼각벨트안'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제1기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08~'10년)

5+2 광역경제권 정책 입안 및 구체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추진 : 이전계획 확정 등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 선도전략산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 개편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마련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의 노력 ('11.4월~)

지역발전정책의 뿌리내리기

’11년 지역과의 소통 활동

현장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54회)

- 특화자원 활용, 도시권 활력 증진, 귀촌 활성화 등

지역언론과의 대화

- 인터뷰,기고등(46회):정부의 지역발전 노력 설명
- 신문 · 방송광고(83회):정책의 핵심키워드 알리기

일반주민 등 정책고객과의 직접 대면

- SNS(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소통도 도입

** 팔로워 3.5만명 (’12. 1월말 현재)*

’11년 지역과의 소통 활동(사례 1)

강원 접경권토론회(’11.11, 양구)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군
- 접경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협력방안

“장관급 인사가 산골까지 내려와 1박 2일 머물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구군수

“지자체 연계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접경권 활성화 지역발전 토론회… 중복성 타파 경쟁력 강화 제기

접경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간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환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8일 오후 양구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강원 접경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7면

김 교수는 “강원 접경지역은 주요 농임수산물의 중복 과다로 인해 내부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연계협력을 통한 중복성 타파, 경쟁력 강화와 접경지역 공통의 테마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마케팅의 차별화,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개 지자체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및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생산, 가공·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Welcome Food 사업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길 강원발전연구원 본부장은 “공동브랜드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작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영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공동브랜드를 통한 판매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상호이해와 협의를 위한 TF팀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명시된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군부대에 납품되는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승용 양구군의회 의장은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증을 위해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유통구조도 구축해야 한다”며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의무적으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은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은 “공동브랜드를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지역간 분쟁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은 수요시장의 확보이다”며 “양재수요가 큰 지역내 군부대를 비롯해 공공기관, 학교에 지역생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이어 수도권, 나아가 해외로 수출하는 판매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김정호 kimjr@kado.net

’11년 지역과의 소통 활동(사례 2)

충청 북부권세미나(’11.12, 제천)

- 충주, 제천, 단양 등 3개 시 · 군
- 중원문화권 문화관광 연계방안

“충주, 제천, 단양 3개 지역이 이웃하면서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처음 만났다”

제천시의회 의장

광역권 단위의 자발적 협력 분위기 조성

- **대경권** : 대구·경북 경제통합 선언('06) 및 첨복단지 공동 추진('09)
- **호남권** : 8개 시·군,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 추진('11. 1)
- **충청권** : 충청권 경제포럼 창립('11. 6)
- **동남권** : 동남권 100년포럼 창립('11. 7)
- **수도권** :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 공동사용 협약('11. 12)

◎ 대전·대구·광주 ➡ 내륙권 R&D 삼각벨트 구축 협의('11. 9)

광역경제권의 가시화

시·군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대전과 인근 8개 시·군 : 대전충청권 G9협의회
- 여수, 광양, 진주, 하동 등 9개 시·군 : 남중권 발전협의회
- 안동, 영주, 문경, 울진 등 10개 시·군 : 경북북부권 발전협의회
- 제천, 단양, 평창, 봉화 등 6개 시·군 :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 남원, 장수, 산청, 함양 등 7개 시·군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뭉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청송·영양·봉화·영월 공동으로 '외씨버선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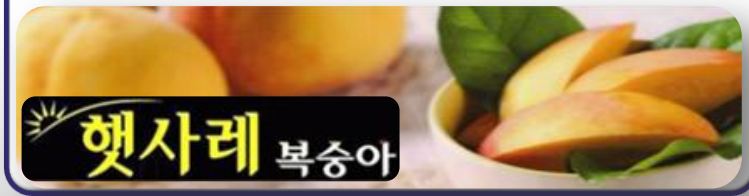
- '11년 11.7만명 방문(121km 개통)

부여·공주 백제문화제 공동개최

- 분리 개최보다 40여만명 관광객 증가

음성·이천 복숭아 공동브랜드개발

- '11년 농식품부 파워브랜드 1위



함께 일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Ⅲ 2012년, 발로 뛰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과의 소통 강화

정책 최일선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 일자리 창출 등 정책과제 논의를 위해 1박2일 현장토론회 등 확충

대상별로 차별화된 소통

- 지역언론 : 정책세미나, 워크숍
- 여론주도층 : 학회 공동세미나, 자문위원 포럼
- 일반주민 : SNS 활용, 정책 아이디어 공모

‘지역위는 현장 근무중’

지역의견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

- 지역발전위원회내 분야별 특별위를 최대한 활용
  - ➡ 지자체간, 관련부처간 **협의 · 조정 강화**
    ** 지역산업, 귀농귀촌, 도시활력 등 7개 특별위 운영중*
- 정책 반영결과는 **해당 지역 · 주민에게 통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정책체감도 제고

발로 뛰는 지역발전위원회

더불어 잘 사는 공생발전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